

새정부 신설부처 세종시 설치 및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국비 지원 등 충청권 주요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좌담회

1.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3년 2월 6일(수) 오전10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5층 화합실
- 주최 / 이상민 국회의원,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2. 좌담회 목적

- 새 정부의 분권, 균형발전 정책기조 상생·경쟁·분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론 형성
- 행정도시 정상추진 여론 형성 및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 제거
- 새 정부 신설부처 세종시 이전 및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국비 지원 요구
- 기타 충청권 주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여론 형성
- 민관정위 구성 제안 등 향후 범 충청권 차원의 추진방향 모색

3. 좌담회 토론 내용

- 새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수부 등 신설부처의 세종시 설치
- 과학벨트 이전부지 전액 국비 지원
- 기타 충청권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새 정부 약속이행 촉구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정위원회 구성 제안 등

4. 참석자 및 토론분야

- 사 회 / 금홍섭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토론1 / 이상민 국회의원 (총괄 토론)
- 토론2 / 정연정 배재대 교수 (총괄 토론)
- 토론3 / 박영송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새 정부 신설부처 세종시 설치의 당위성)
- 토론4 / 문창용 대전광역시 과학특구 파장 (과학벨트 이전부지 전액 국비지원의 당위성)
- 토론5 / 이상선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 제정 등 주요지역현안)

<토론1 / 이상민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계획대로 세종시 설치 당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도 국가 전액부담해야 하고, 박근혜당선자의 先국가지원 약속 지켜져야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설치 당연

최근 중앙언론사 등에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에 영구 설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며,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수도권 옹호론자들의 바램이고 일부 견해일 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설치의 당초 이전계획과 변경고시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8월20일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2005.10.5에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12년부터 '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지난 2008년 정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 기관은 6개 부처가 통합, 6개 부처가 폐지, 3개 부처가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고시했던 12부4처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으로 조정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전고시변경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때 폐지되었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시 통합한 부처로서 마땅히 정부의 이전계획과 변경고시에 따라 그대로 세종시에 설치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만약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설치를 변경하여 과천 등 타 지역으로 옮기려는 술책이 시도된다면 민주통합당 당차원에서 강력하게 저지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2.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가부담, 선국고지원 약속 지켜져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당초 정부예산에서 빠져있던 것을 이상민의원원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700억원을 반영시켜 예결위로 넘겼는데, 기재부와 새누리당은 부지매입비의 ‘반’을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고작 175억원만 반영시켜주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반영이 무산되고 말았다. 대전시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대전시가 받을 수 없는 안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에당초 박근혜당선자는 ‘능력껏 대전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先국고지원 약속을 했었고,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공약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선결과제이다. 2014년 착공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에 무조건 부지매입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일부 부담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과학벨트 성공적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대전시의 재정 사정 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도 절반을 부담하라는 얘기는 과학벨트를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기간 과학벨트 국가부담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성공적인 건설’만 약속했는데, 결국엔 눈속임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다.

법률적으로 추경편성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이번 추경편성도 어려울 전망이고 보면, 과학벨트 사업은 1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박근혜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정<부지급보증>을 통해서라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지원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토론2 / 정연정 배재대 교수>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설치의 근거

현행특별법에 근거해서보면, 외교통상, 통일, 국방, 법무, 행정안전, 여성가족부등을 제외한 행정부처들은 세종시 이전 부처로 정의되어 있음.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조직체계하에서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능이 대폭 이양되어 구성된 신설부서인바 이 부처들이 세종시에 입주기로 되어 있는 만큼 관련 기능을 이관 받아 신설되는 부서 역시 세종시 입주하는 것이 현행법상 타당함

특히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신설부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나 법개정 조항상의 반영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법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과천 청사로의 이전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신청사 부지 부족, 관련 공무원 이주 등에 투입될 비용(1000억원 상당으로 계상)등에 대한 논의가 과천청사로 신규 부서가 입지해야 하는 이유로 과천의회는 물론 정부측의 입장이 발표된 바 있으나, 이러한 비용은 신규로 창출된 비용이 아니라 세종시 설계 및 구축계획안에 반영된 공무원 수와 기능에서 확대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세종시 청사에 공간과 이전은 관련 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임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함.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지방과 수도권의 균열 및 갈등을 다시한번 조장할 수 있는 사례이고, 이는 통합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임

과학비즈니스 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정부 부담

과학벨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사업이고, 공모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어 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전 선정지역으로서 대전지역이 중앙부처와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부지매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타당함. 이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일정한 합의가 있었고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총선과 대선 모두 이러한 사업적 타당성에 대한 입장을 견지한바 있음

- 국책사업 중 공모사업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사업선례들에 견주어 부지매입을 일부 이든 전체이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사례에 대한 중앙부처의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 왜 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최근17개 광역시도지사와의 만남과정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동일한 원칙 하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사업임

<토론3 / 박영송 세종특별자치시의원>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세종시이전이 원안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다. 지난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수정안의 핵심은 행정중심기능 훼손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이전부처 논란은 또 다시 행정중심기능, 원안이 흔들릴 위기로 진화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2년6개월이나 고의로 지연시켜 세종시 백지화를 추진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후유증으로 건설이 지연돼 이전기관 공무원들이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이전이 합법이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는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통상부, 통일, 법무, 국방, 행안부, 여가부 등 6개 부처만 명기되어 있어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특별법에 부합되는 당연한 사항이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당초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었다. 2005년 10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마땅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취지 부합하는 것이며, 신설부처의 과천청사나 부산이전은 또 다른 행정비효율을 낳을 것이다.

박근혜당선인은 “세종시가 제대로 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세종시의 완성을 책임지겠다” 고 공약했다.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려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처의 이전을 놓고 유치경쟁이나 특별법 개정 논란으로 더 이상의 갈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 이전계획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 신설부처 세종시 유치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고, 세종시장도 인수위에 이와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충청권 정치권도 이견이 없다.

이런 조건에도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저울질을 한다면 충청인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선직전 새누리당의 반대에 의해 국회통과가 좌절된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문제와 함께 충청인의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새 정부의 신뢰는 출범도 전에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토론4 / 문창용 대전광역시 과학특구 과장>

과학벨트 예산상황 및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부담의 당위성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의한 과학벨트 예산의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반영 예산을 보면 `12년도 는 투자계획 4,100억원의 약 54%인 2,2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13년도에는 투자계획 7,900억원의 약 33%인 2,633억원만 반영되는 등 투자계획에 절반도 못 미치는 약 40%만 반영되었다.

정부에서는 사업진도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이유로 계획된 예산을 삭감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와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지매입비의 경우 과학벨트 기본계획의 투자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으로 대상면적 은 전체면적 3,443천m² 중 1,563천m²(47만평/가속기31, IBS 16)이며, LH에서는 부지매입비(토지원가 +조성비)로 약 7,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하였고, 정부는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대전시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과 비즈니스 융합기반 마련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정부의 지방비 부담논리의 이치에 맞지 않으며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이있다.

첫째, 정부의 과학벨트 기본계획상 오류이다. 정부의 과학벨트 기본계획 초안에는“거점지구 개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13년 예산부터 반영”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대전시와 사전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확정된 기본계획에는“거점지구 개발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로 일방적으로 지자체 부담 근거를 명시하였다.

둘째, 정부의 지자체 분담 논리의 모순이다. 타 지자체 국책사업인 침복단지, 뇌연구원 등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사례와 논리를 정부의 일방적인 「지정사업」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모순된 주장이다.

셋째, 지역개발 효과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자체에 큰 혜택이 부여되는 사업이므로 지방의 재정분담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기초과학육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지자체 부담 근거가 없으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막대한 소요예산 부담능력이 없으며, 지자체는 정주여건 등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토론5 / 이상선 세종시 정상건설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시기 이명박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드라이브에 맞서 소위 ‘원안+알파’를 제시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알파’의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의구심.

세종시 반대 세력의 원안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의 주된 근거가 ‘행정비효율성과 자족성 부족’인 점에 미뤄 유추컨대 ‘+알파’는 결국 ‘자족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복합기능을 상정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음.

따라서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부조직개편안 중, 신설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의 입지는 마땅히 세종시여야 함을 분명히 밝혀 더 이상 지역 간의 갈등구도를 차단해야 마땅할 것임에도 이러저러한 가능성들이 제기되는 상황에 크게 유감.

또한 새정부의 출범에 앞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세종시설치법 전부개정안’이 새누리당과 행안부의 부정적 기류와 저항으로 대폭 개악될 소지가 있음에도 (새누리 집권당적인) 유한식 시장의 세종시와 시의회 및 민간조직에서 이렇다 할 강력한 대응기류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은 납득할 수 없음.

더불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대전 거점지구와 충청권 3개 기능지구 대상지역의 소극적 대응의 한계 및 당선인 또는 인수위 측과 마치 선문답을 주고받는 듯한 안이한 대응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됨.

아울러 1989년 대전시와 분리된 이후에도 대전논리에 포섭된 충청도정의 기형적 자치구조를 해소하고자 하는 청사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국비지원이 타당함에도 중앙정부의 시혜적 태도와 대전시의 일정한 방조는 결국 충청남도청사 활용방안에도 걸림돌로 작용함.

태안 유류피해지역 주민의 고통에 대한 안이한 대응과 유성기업 사측의 용역불법폭력사태 방치 사안의 해법은 결국 박근혜 정권의 몫이자 지역사회의 과제임.

결국에는

-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처의 세종정부청사 입주와 추가적 자족기능의 확보, 설치법 전부개정안 관철을 통한 세종시 정상추진의 확고한 기반 구축,
- 과학벨트의 부지 매입 전액 국비 지원과 기능지구 예산 증액 등을 통한 국정과제의 신뢰성 증대,
- 도청이전특별법 조속 개정, 태안유류피해지역 보상 및 유성기업사태 등,

지역현안의 해법이 중차대하고 당면의 과제임.

- 이를 위해 '세종시'와 '과학벨트'의 경험을 교훈삼아 잔여 인수위 활동시기 및 정권 초기에 '범충청권'차원의 민관정 공동대책 기구를 통한 전략적이고 상시적 대응이 요구됨.
- 지역 현안 관철과 이해 조정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 기구'구성을 공식 제안함.
- * '세종시정상추진 충청권공대위' 및 '과학벨트 대선공약 이행촉구 범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조직과 활동 및 경험 참조